

공공부문서 착취적 다단계 하도급 퇴출... 2년 고용 보장도

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사전심사제로 가격 적정성 따져
단순 노무 최저 낙찰하한율 2%p↑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6개 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중사자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중간 삭감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2차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

다. 이를 위해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원도급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하도급 활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하도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순 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상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상향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급여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 공공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확대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 1년 이하 단기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약속서'

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6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농협 "정부 협력 통해 쌀 수급 선제적 조절"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농협이 올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2026년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부 비 매입자금 지원방안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양곡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공유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 비 전국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전농협 조합장) 등 전국 130여 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도 참석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을 통해 쌀 수급균형에 노력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업인 등 시장주체 간 협력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합천댐에 수상태양광 시설 조성

국내 첫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RE100 모델 태양광 사업 추진
총 사업비 366억... 연말 준공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모델'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미 가동 중인 합천 1단계(41.5MW)의 후속 프로젝트로, 경남 합천댐 수면에 21MW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66억 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가 각각 약 18억 원과 37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며, 향후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4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오규명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왼쪽 네 번째)과 오봉근 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프로젝트 금융(PF)을 통한 추가 사업비 조달과 마을법인 설립 지원, 건설 공정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상 태양광과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방식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출 기업인 롯데케미칼에 공급되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직접적으로 돕게 된다.

또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은 마을법인

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명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공공주도 RE100 태양광 사업"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운영체계 개선

공동주택 완속충전기 문제점 파악

정부가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및 운영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

에 맞게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 사양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사람' 미래 경쟁력 핵심 요소... 교육·인사 체계 혁신"

근로복지공 인재를개발원 15주년 새로운 비전 '인재중심경영' 제시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인재중심경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재개발 혁신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계기로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은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사람'을 강조하고, 교육·인사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

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육성체계를 도입한다. AI 역량 교육을 ▲전 직원 대상 기초 교육 ▲실무자 중심 심화 교육 ▲관리자 중심 리더 교육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교육을 20년 이내 모듈형 콘텐츠로 제작해 필요 시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현장 직무교육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힐링형 교육' 도입이다. 공단은 모든 집합교육 과정에 휴식과 심리회복 프로그

램을 결합해 배움과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증가하는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고려한 조치다.

공단은 '비움(Healing)'을 통한 채움(Learning)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혁신은 인사제도 개편과도 연계된다. 공단은 역량 중심 승진제도를 도입해 교육·평가·승진이 연결되는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